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들으면 들을수록 비위가 상하고 억지스런 느낌을 주는 말 가운데 하나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경제용어다.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생산이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마이너스 성장 이라는 기묘한 말로 표현하는 모양인데, 이른바 전문가들의 말장난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용어는 모를지경 경제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전진과 성장은 긍정적인 플러스의 개념이고 후퇴나 축소는 부정적인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보고, 성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경제 후퇴나 경제 축소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부릅으로써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버리려는 통제와 금지의 언어이다

다. 그래서 경제관료들의 사전에는 '성장'만이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인간을 남심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남성은 그냥 남성이고 여성은 비(非)남성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

부르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 "좋아졌네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만 노래하다 보니 "나빠졌네 나빠졌네"는 길거리가 되고,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는 '불신 풍조 조장'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던 시대의 살벌하고 폭력적인 사고방식을 나는 이 용어에서 발견한다.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우리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무한히 성장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확신을 전제로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 강을 세상의 유일한 강으로 알고 모든 강은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고 생각 했으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유프리테스강을 보고는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처럼 경제 성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경제 성장이 필수록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가치로서 우리의 사

대보다 자주국방이 강화되고 사대주의는 약화되었을까? 조선시대보다 사회적 약자와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는 나아졌을까? 일제시대보다 민족적 일체감과 공동체의식은 더 강화되었을까? 그리고 1960년대보다 더 청정한 환경에서 언론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있을까? 농촌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새마을운동 이후 더 살기 좋아졌을까?

내가 궁금한 이런 쪽의 통계나 수치는 국책연구소나 대학에서 잘 연구하지 않고, 정치인이나 관료들과 언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국가 신인도나 공무원의 청렴도, 행복지수, 인권지표들은 왜 경제성장을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홍보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이런 지표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이런 지표들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고 적법성이 의심되는 미디어보다 흥보가치가 적기 때문일까?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민점기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데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2010년이면 5·18민중항쟁이 일어난지 30년이 됩니다.

광주는 광주다워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버리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현대화를 뒤쫓으면서 오히려 낙후되고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5·18이라는 상징이 비록 명에 걸려 누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떨쳐 날 것이 아니라 안고가야 하는 것입니다.

5·18 살아있는 문화 중심 도시를 꿈꾸며

다. 이제 몇 날이 않은 5·18사적지를 지키고 가꾸면서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민주, 인권, 평화를 내세워야 합니다.

옛 전남도청 신본관(별관)은 80년 당시 시민군과 항쟁지도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전남대 정문을 비롯하여 YWCA, 광주역, 들불야학, 삼무대 등이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자리를 옮겼거나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선다고 옛 전남도청 신본관을 허물겠다고 합니다.

광주의 문화, 그리고 미래는 누가 뭐라고 해도 5·18의 역사와 함께 가야 하며 5·18을 내세워야 합니다. 차로 따질 수 없는 역사유산, 문화유산을 지금 까지 방치해왔고, 훼손해왔습니다. 그것이 광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체가 5·18의 유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문화전당 건립과 운영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채우는 일은 또 다른

지만 결국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재되어야 할 '그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5·18로부터 나왔던 대동정신,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꿈꾸는 미래는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막연한 개발과 국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엄청난 자본이 투여될 문화 중심 도시 광주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신본관은 5·18의 역사와 정신, 가치를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원탁 회의'를 통해 협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시도 민대책위와 5월 단체는 몸속의 신장을 때 문화 전당에 기증하는 심정으로 '오월의 문'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진정으로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원한다면 정부와 문광부는 '오월의 문'을 받을 것입니다.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대표〉

기고

박홍수



우리 경제는 작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기업은 문을 닫고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어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경기 불황 속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과 어린 신들일 것이다. 버려진 아이들, 홀로 쓸쓸이 살아가는 노인들, 심지어는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단면을 통해 우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운영의 잘못 등을 말할 수 있

서는 학대받고 버려진 아동과 노인분들을 보호 및 치료,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동지킴이단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과 노인人们对 대학 및 방임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음성을 보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더욱이 얼마 전 국제 청계에 따르면 전남은 201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발표되었다. 유엔(UN)은 65세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자

약자의 편에서 서로 돋고, 밝은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연말 우리는 IMF 때보다 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을 지켜보았다. 비록 기업들의 기부는 줄었으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액 기부자들이 늘어 우리 지역에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나 관련 복지시설 수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2007년에는 전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금년에는 전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하면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데 뛰어난 힘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방임과 학대 사례는 2007년에는 245건이던 학대 건수는 지난해에는 328건으로 현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노인들의 방임, 학대 사례 또한 2006년 312건, 2007년 335건, 지난해에는 3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은 우리 도가 농도임을 감안하면 신고되지 않은 방임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앞으로 전남도의 아동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재정 지원이 가장 소중히 보살펴야 할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들을 위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관심으로 따뜻한 세상의 인정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순천1, 민주)〉

바이오 에너지원 각광 '타피오카'에 관심을

칠순잔치·결혼식 피로연 등 '위조식권' 철회를

체식물 자원으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옥수수나 설탕이 석유를 대체하는 에탄을 생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분용 곡물자원이 사료나 에너지 원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래 청정자원의 확보와 개발을 위해서라도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앞으로 농지 활용에 더 신경을 써서 미래 곡물자원 확보를 위한 기본 용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석원·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마치 선거가 끝난 후 개표결과를 놓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듯 일일이 다 세어볼 요량으로 식권 물자를 받아들고 행동을 취하자 결국 식당 측에서 "그냥 됐으니까!" 그쪽에서 계산한 대로 합시다"라며 무마하려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위조 식권이 섞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닌 잔칫날에 그런 거 가지고 턱태격 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돈 몇푼 가지고 너무 깊은 계산을 오차 범위 내에서 대략적인 하객의 숫자를 깨우쳤다.

그러나 혹시 이런 사례가 환갑, 칠순잔치, 결혼식 피로연 등에서 공공연히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 식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혹시 잔치를 위해 식당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을듯하다.

▲남상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호남 광역경제권 사업 첫 단추 껴지지만

영남권과 비교해 영·호남의 2대 1 불균형 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남 2개, 호남 1개인 광역경제권 개발계획대로라면 영남이 호남에 비해 2배 더 많은 선도산업과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받게 돼 영남 편중·호남 소외 구도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광역경제권 사업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사업권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5+3 광역경제권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경제부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2 광역경제권의 불합리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광역경제권 재조정에 대해 가다마다 말이 없다.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5+2 광역경제권을 고집하지 말고 최소한 '5+3'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농업보조금 개편 영세농 보호대책 세워야

논란을 빚었던 농업 보조금 개편의 윤곽이 잡혔다. 보조금 총액은 현행대로 5조2천억원대를 유지하는 대신 288개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이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된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진흥위원회가 1단계 활동을 마치고 내린 결론이다.

농업 정책의 체계를 대수술하기 위해 출범한 농어업진흥위원회가 보조금 총액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영세농가 보호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농업보조금을 줄여 이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보조금 등으로 농민을 단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촌 인구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의 농가 소득은 9개 도(道) 중에서 8

無等鼓

총선 대원군 이하응(1820~1898)은 '쇄국' '옹고집'의 이미지로 각인돼 있다.

조선 말기 철종이 후사(後嗣) 없이 죽자 왕실의 후사 결정권을 쥐고 있던 조대비는 종친인 이하응과 밀약을 맺고 그의 둘째 아들 명복을 세자로 삼았다. 이하응은 1863년 아들인 고종이 열두 살의 나이로 즉위한 후 잠깐 동안 조대비의 수령령정을 거쳐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대원군(大院君)이 되었다.

대원군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세도정치 청산이었다. 그는 이전까지 조정을 쥐락펴락 하던 안동 김씨 일문을 축출했다. 이어 문벌과 사색당파를 배제한 인사등용을 단행했다. 또 47개 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서원을 철폐해, 국가 재정의 낭비와 당쟁의 요인을 없앴다.

실타래처럼 얹혀있는 정국에서 단행될 이번 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탕평에 힘쓰고 당쟁을 없애려 했던 대원군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舉事室長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 저자·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222-4918 | 사 회 2 부 2200-692 | 경 영 지 원 국 2200-511 | 문 화 흥 보 국 2200-541

〈F A X 222-4905〉 | 문화생활 2200-661 | 〈F A X 222-8005〉 | 〈F A X 222-051〉

편집국외내 222-4918 | 문화생활 2200-661 | 〈F A X 222-521〉 | 독자서비스국 2200-651

〈F A X 222-9500〉 | 〈F A X 222-9500〉 | 〈F A X 222-9500〉

편집국내내 222-4918 | 문화생활 2200-661 | 〈F A X 222-536〉 | 서울 지사 02-773-9335 | 〈F A X 02-773-9335〉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